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아동·청년정책 발표

“군 복무, 공공기관 호봉 반영… 아동수당 연령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수수료 인하 유도”

“소외아동 지원 모색·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군 복무 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군 복무와 관련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당시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의 협상 끝에 12개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알려진 20~30대 남성층 표심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 요구에 맞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

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다”며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산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청년 맞춤형 공공 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생활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들겠다”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저립 준비 청년·가족돌봄 청년 지원 체계 강화 등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중주면'에 나선 6일 충북 보은군 화채농원 '숯갈'에서 열린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어린이 정책 발표문’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

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가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영계 여러(돌봄 아동), 수용자 자녀, 경제선 지

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라는 단어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어린이의 웃음소리가 계속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어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문수 “당에서 후보 끌어내리려 해… 일정 중단”

국민의힘, 전당원 단일화 찬반조사로 압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6일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주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에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 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 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다.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로 올라가서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7일 6·3 대선과 관련

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원들 사이에서 김·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를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3일 6·3 대통령 선거에 나설 당 후보로 김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선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최종 경선에서 총 45만5044표로 56.53%의 지지를 얻어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후보로 확정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3.47%(34만 9916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한덕수·이낙연 “개헌연대 구축 협력”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 새미래 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6일 ‘개헌 연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한 후보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약마의 계곡을 넘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두 집단(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체제의 위기가 심화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한 후보)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은 헌법개정을 통해 정상 국가로 갈 것이나,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 국가로 갈 건지의 대결”이라며 “한 총리와 저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이 총리(이 상임고문)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충고와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



이낙연



한덕수

로 더욱더 이낙연 전 총리님과 협의의가면서 반드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괴물 국가로 만들려는 분들의 지배에 들어갈 것이나, 세계 7대 강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이번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 당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선상투표를 신청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대상은 병원 입원이나 신체장애 등에

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도소 등 교정 시설 수용된 사람, 근무지 등의 여건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관할 시군청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서면 접수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외향 선박 등에 승선 중인 선원들이 선박 내 설치된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 신고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선상투표일 전 입국 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투표로 전환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유) 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nd@naver.com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